

# 2022년 제1차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결과 보고

## □ 포럼 개요

- (일시/장소) '22. 6. 22.(수) 15:00~18:00 / 행정기록관 2층 세미나실
- (주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공개·활용 확대 방안
  - 발표 : 이승억 서비스정책과장(국가기록원), 장 신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 (좌장) 도면희 교수(대전대학교)  
강호출 센터장(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이용기 교수(한국교원대학교)

발표 제목	발표자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업무 개선을 위한 방향 검토 - 일제 조선총독부 기록물 공개 추진 사례와 관련하여 -	이승억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과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험로	장 신

- (참석) 총 56명
    - (내부) 기록정책부장, 행정기록관장, 업무 담당자 및 원내 직원 21명
    - (외부) 발표·토론·사회자, 기록관리 기관 담당자 등 35명
- ※ 중앙부처(5), 교육청(8), 특별행정(7), 지자체(3), 군(3), 대학교(6)

## □ 주요 논의내용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제한적 열람 제도의 개선 필요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정보에 대한 전문가 육성 및 배치 필요
- 국가기록원과 관련 연구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소장기록물의 학술적·대중적 활용 확대 필요성 공유

○ (강호출) ① 국가기록원이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소장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봄. 다만 작년 기록원의 공개심의회 사례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비공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연구자 대상 제한적 열람 제도는 개인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외부 연구자가 기록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 있게 함. 따라서 기록의 공개·활용 확대를 위해 제한적 열람 제도의 법적인 보완과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함

② 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의 기본목록을 작성·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전거통제나 시소러스 등 검색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검색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바,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정보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기록의 생산 맥락, 이관 이력 및 이용 분석 등에 뛰어난 인력 확보는 검색서비스 뿐만 아니라 활용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본목록을 만드는 것은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도 소장기록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나, 대부분 외주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되어 국가기록원 내부에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 기록정보서비스 업무의 조직화를 통해 전문가가 양성 및 배치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열람에 대응하게 되면 기록의 활용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임. 외부에서의 기록 이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끊임없는 개선을 향한 내부에서의 노력을 통해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공개·활용은 확대될 것임

=> (이승억)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에 대한 전문성 제고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소장기록물의 구성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이용자들이 기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이용자에 대한 이력이나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국가기록원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나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고 서비스해야 함. 국가가 소유한 정보 제공은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재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를 이용하는데 보다 능숙한 전문가들이 국가기록원에 필요함.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외부 연구자는 기록을 활용하여 필요한 연구를 하는 파트너십은 실질적 상호이익에 기반해야 함

○ (이용기) ① 국민의 알 권리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로 현실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음. 발표자의 공익성에 관한 언급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제한적 열람과 관련하여 비영리 목적보다 공익성을 조건으로 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이 인상적임. 국가기록원과 외부 연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공익에 일조하는 협력 사업을 기획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는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학술연구 또한 공익에 부합해야 함. 소장기록물 공개로 인한 학술연구의 이익과 잠재적 피해방지라는 보편적 이익을 추상적으로 상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관련 사례들을 추적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함. 국가기록원이 소장기록물 공개 관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록생산 후 80년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함. 다만 자료의 민감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승익)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정부 부처에 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일종의 이슈파이팅을 한 사례를 참고하였으면 함. 우리나라 역시 비단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잘 이관·관리 될 수 있도록 학계가 문제제기하고 요구하면서 환기하는 역할이 필요함

=> (장 신)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에 대한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가능하면 해방 이전 자료들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면 함

②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의 온라인 검색이 이용하기 불편함. 국가기록원의 특성에 맞는 절충방안을 찾아서 검색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함

=> (이승익) 검색과 관련한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기록의 검색은 비개입 검색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 검색이 필요할 때가 있음. 국가기록원이 기록 이용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비개입 검색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국가기록원은 비개입 검색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검색 지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 (장 신) 상당수 연구자가 서고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방문하여 열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원본, 마이크로필름·사본, 온라인 제공으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온라인 검색 시 기록 제공에 관한 형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③ 외부 이용자로서 비공개 기록의 제한적 열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함. 먼저, 영국 TNA나 프랑스 Archives Nationales의 방문 연구자 제도처럼 연구자가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파트너십으로서의 관계를 제안함. 두 번째로 개인정보의 노출을 배제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연구를 위한 분석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학적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도록 소장기록물의 공개·활용의 두 가지 트랙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 (이승익) 방문 연구자 프로그램은 국가기록원이 고려했던 제도임. 독일의 연방기록원이 기록을 이용해서 연구성과를 전시하고 있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으며, 외부 연구자와 국가기록원 간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봄

=> (강호출) 현재 국가기록원은 학계와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연구년을 국가기록원에서 보낼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임

=> (이용기) 최근 한국 근현대사 학위논문 상당수가 국가기록원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확인함. 학계에서도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이 학술적·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되면 될수록 국가기록원의 지명도가 올라가게 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④ 기록물 생산연도가 총독부 시기가 아닌 것으로 편철되어 있지만 실제로 총독부 시기부터 생산된 기록을 포함하여 편철된 경우가 있음. 기록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철이 개선되기를 바램



곽진욱 기록정책부장님 환영사



발표 전경



토론 전경



종합 토론